

민족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일본 민족주의*



이연옥
(부산대학교)
(idisfeel@hanmail.net)



1. 서론

일본의 전통적인 민족관은 단일민족론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단일민족론은 일본사회에서 민족적 구성에 대한 지배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의 핵심은 섬나라 특유의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일본은 다양한 인종적 교류가 차단되어 왔고 그 결과 다른 국가들보다 피의 순수성, 단일성을 유지시켜 왔다는 것이다. “일본은 단일 민족이다”라는 일본 수상 나카소네의 발언과 고베 지진시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이

* 본 논문은 2007년(중점연구소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B00026).

빨랐다”(가이자와 코이치 2001, 279-280) 라는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단일민족론은 1990년대까지 일본 정부나 정치인에 의해 공식적으로 천명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 민족환경의 역사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주장해온 단일민족론이 허상이라는 점을 간파하기란 어렵지 않는 일이다.

통일국가가 형성되기 오래 전부터 한반도와 중국 대륙계 인종집단의 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국가들과의 크고 작은 전쟁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적교류가 있어왔고, 근대국가 이후의 본격적인 제국주의 시기에는 침략전쟁을 통해 다양한 민족들을 복속시키거나 점령하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이질적 인종과의 교류와 혼합정도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조정남 1999,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탈과 정복의 결과로 일본 내에 존재하게 된 아이누인을 비롯하여 오키나와인, 재일한인 등의 일본 내 이민족집단에 대해서 공식적 인정을 거부해왔으며, 199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본에 소수민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가이자와 코이치 2001, 280).

그러나 1980년대 이래 가속화된 국제화, 개방화의 결과 일본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게 되었다. 일본 내 정주하는 외국인주자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일본의 외국인등록자수는 2,186,111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1.7% 이상을 점하고 있다. 현재 일본내부의 민족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사회는 다민족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인종적 민족적 단일성과 관련하여 일본인들이 기존에 유지해오던 단일민종, 단일민족이라는 관념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과거 국가적 단합을 위해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시기와는 다르게 오늘날 일본은 다른 문화와 언어를 지닌 사람들의 적응문제, 다른 국적을 지닌 주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단일민족에 대한 일본의 강조는 국가적 단합이 강조되던 과거 식민지 침탈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새로운 문화를 가진 다양한 외국 이주민들이 일본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근대국가 형성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일본사회에서 강조되어왔던 단일민족신화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에 대한 거부와 반감에 대한 바탕이 되고 동시에 일본 민족주의의 기저를 이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다민족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타자인 타민족에 대한 일본의 수용과 대응을 살펴보고, 그것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 이후 식민지침탈과정에서 파생된 일본의 전통적 이민족집단에 대한 일본의 수용태도 및 대응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외국인이주민이 급증하는 1980년대 이후의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일본의 수용 및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일본의 전통적 이민족집단과 일본의 대응

일본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이민족집단은 일반적으로 아이누인, 오키나와인, 재일한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기 인구 크기, 일본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존재하게 된 배경과 역사, 이민족집단으로서 겪는 차별의 근거와 내용의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 각 이민족집단의 일본 내에서의 기원과 역사 등의 배경을 살펴보고, 일본과의 갈등양상을 비롯한 이민족집단의 운동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양태를 고찰해보았다.

1) 아이누인

(1) 배경과 역사

아이누는 홋카이도의 토착민으로 일본 홋카이도, 혼슈의 도호쿠 지방과 러시아의 사할린, 쿠릴열도, 아무르, 캄차카 반도 등지에 살면서 독자적인 전통과 아이누어 등을 비롯한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온 민족이다. 오늘날 일본의 지배민족이라 할 수 있는 야마토족이 14세기 무렵 세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누족은 항상 그 북방의 경계선에 마주치는 존재로 17세기 말까지는 주로 교역을 통한 상호의존적 공생관계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19세기에 접어들 무렵(1799년)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한 에도막부는 아이누민족의 영역인 ‘에조치(아이누인들의 땅이란 뜻으로 지금의 홋카이도, 사할린, 쿠릴열도를 포함)를 직할령으로 삼아 아이누족과 러시아의 연결을 막고자 유화정책을 취하면서 아이누족의 귀속을 장려하게 된다. 이후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일본에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1869년에 아이누의 땅이란 뜻의 ‘에조치’란 이름을 버리고 ‘홋카이도’란 새이름으로 자신들의 국가영역에 포함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민족으로 존재해왔던 아이누족은 법적으로 일본과 동일민족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정병호 1995, 304-305).

현재 일본에서 아이누인구는 2만 5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라 할 수 있는 2006년 홋카이도 우타리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아이누 민족의 수는 23,782명이라 밝혀진 바 있다.¹⁾ 하지만 홋카이도 도청의 조사에 의하면 “자신을 아이누민족이라 밝히는 사람은 약 2만 5천명이라고 하나 실제 10만에 달하는 아이누 민족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가이자와 코이치 2001, 297). 그 이유는 많은 아이누 족이 자신의 출신을 숨기거나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민족차별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 그러나 이 수치는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스스로를 아이누민족이라고 밝힌 사람에 한 정되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아이누 민족은 홋카이도 이외 일본 각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차별을 우려하여 아이누 민족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이누 민족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아이누의 민족운동과 일본과의 갈등

아이누의 민족운동은 1920년대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일본의 아이누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아이누인 스스로가 아이누인임이라는 사실을 은폐시키도록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차별은 아이누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운동을 초래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1946년에 사단법인 <홋카이도 아이누협회>가 설립되어 아이누민족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아이누민족운동은 보다 조직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는 아이누민족이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보존과 전승에 대한 관심과 운동이 고양되었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 각지에서 민족문화보존회가 설립되어 아이누 문화유산이 수집 전시되었으며, 민족예능보존회가 설립되어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더불어 아이누어에 대한 학습 등 아이누 민족문화의 재생과 복원이 진행되었다.

민족문화 보존운동의 영향으로 아이누인들의 민족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1980년대 이후부터는 아이누민족의 권리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보다 확대되어갔다. 1984년, 홋카이도 아이누협회는 '아이누 민족에 관한 법률(안)'을 일본정부에 제출하며 아이누 민족차별 정책의 상징이었던 '홋카이도 구토인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아이누민족이 선주민족으로 인정받고 선주권을 회복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가이자와 코이치 2001, 297). 이와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캐나다, 미국의 인디언운동을 비롯하여 해외의 소수 선주민족, UN²⁾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등 국제적 연대를 취함으로써 아이누민족은 일본 정부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요구를 강화하게 된다.

1994년에는 아이누민족의 대표가 일본의 국회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아이누민족 운동은 정치적으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다. 1997년에 이르면 오랫동안 아이누인들이 폐기를 주장해온 '홋카이도 구토인보호법'의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라 할 수 있는 '아이누 문화진흥법'³⁾이 제정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정병호 1995, 313). 그러나 아이누진흥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함과 더불어 아이누들의 선주민족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운동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3) 일본의 대응

단일민족 신화에 의지하여 근대 국가의 형성을 도모한 일본은 아이누인들의 주요 근거지인 홋카이도를 강제 편입하면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아이누족에 대한 차별과 동화

2) 유엔은 1992년을 '세계주민의 해'로 지정하였고, 1994년부터 10년간을 '세계 선주민 국제 10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누민족의 존재를 알리며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3) 1997년 5월 8일 중의원에서 선주민족인 아이누에 대한 새로운 법률안이 가결되었다. 아이누신법이라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아이누 문화의 진흥 및 아이누의 전통 등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당시 메이지정부는 아이누의 주거지를 국유화하였으며 아이누민족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민족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는 한편 일본어 사용을 강제화하였고 더불어 창씨개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아이누민족의 전통적 풍습은 '미개' 하고 '비문명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풍습을 금지시키고 복식과 풍습을 일본화 하는 등 아이누 민족문화를 탄압하는 동시에 강력한 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조아라 2010, 110-111. ; 조정남 1999, 137).

1899년에는 홋카이도 선주민인 아이누에 대하여 법적으로 토인(土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본토의 주민에 비해 열등적인 지위를 줌으로써 그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이토 아비토 2009, 31). 더불어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이라는 아이누 민족의 농경민화와 교육을 통한 동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아이누 민족 차별정책의 상징으로서 1997년 아이누문화진흥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차별과 동화정책에 따라 아이누 민족의 생활양식은 급속히 붕괴되어갔으며, 전통적인 사회조직도 붕괴되었다. 1945년 제국 일본의 패망 이후에는 일본이 아이누족과 같은 소수의 선주민 집단은 완전히 일본민족으로 동화된 것으로 간주하여 종족적 이질성 자체를 묵살하는 정책을 수행한 결과, 일본사회에서 아이누란 존재는 공식적으로는 없어진 과거의 문제로 간주되어졌다(정병호 1995, 309).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아이누족이 느끼는 민족차별은 가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 간에 아이누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다양한 차별을 받아야만 했다. 교육, 결혼, 취직 등 생애사 전 과정에서 아이누족은 자신의 인종적, 종족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구별되어 따돌림을 받고, 차별을 받았다(정병호 1995, 309). 하지만 아이누민족의 지속적인 요구와 운동의 영향으로 인한 일본정부와 아이누민족간의 갈등과 타협의 결과 아이누문화진흥법이 1997년에 제정됨으로써 일본의 아이누민족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보이게 된다. 아이누문화진흥법은 일본사회에서 함께 살아오고 있는 이민족집단의 존재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수민족집단의 독자적인 문화와 민족영역의 차별성을 처음으로 분명히 하면서 이의 보호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민족의식에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조정남 1999, 43).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아이누 민족의 입장에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조아라 2010, 124-125). 아이누민족에 대한 강탈과 강제동화의 역사는 얼버무려졌고, 반성이나 사과와 같은 국가의 역할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그 한계로 지적한다. 또한 일본에서 아이누라는 소수민족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선주민족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 문제로 제기된다. 일본의 이러한 입장은 선주민족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는 국제적 관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하였다. 아이누 문화진흥법을 필두로

한 일본의 정책이 과거의 전통문화에 한정하고, 이의 재현을 통한 관광상품화에 치중함으로써 아이누의 선주민족으로서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외면하였다는 비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아이누들의 선주민족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운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 오키나와인

(1) 배경과 역사

오키나와인은 인종 및 민족적으로 본토 일본인과 구분되는 원주민 중의 하나인 류큐(琉球)민족이다. 이들은 현 일본의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 등에 주로 정착해 살고 있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는 구분되는 류큐문화권을 가진 독자적인 국가로서 류큐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14세기 류큐왕국 성립이후 그들은 명, 조선, 일본, 동남아 각국과 무역을 하며 번성하였다. 17세기초(1609) 사쓰마번의 씨마즈 씨족의 침입 후에는 속령화됨으로써, 한편으로는 명·청에 조공을, 다른 한편으로 사쓰마번에 의해 복속된 일지양속체제를 겪으면서도 독자적인 왕국을 유지했다(이지원 2008, 226). 그러나 1879년 류큐 지배층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류큐왕국이 일본 메이지정부에 의해 멸망하고 오키나와현이 설치되어 일본으로 편입되고 말았다. 이후 1945년-1972년까지는 미군의 통치를 받다가 1972년에 다시 일본으로 재편입되었다.

오키나와현이 설치된 이후에 오키나와인들은 일본으로부터의 ‘차별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인 동화노력’이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한 일본인’이 되지 못하는 오키나와인들의 고뇌가 축적되어 갔다. 일본의 황민화정책을 내면에게까지 수용하여 미군과의 전쟁에서 일본을 위해 전사하고, 인구의 1/3이 사상자로 희생당했지만 일본정부는 오키나와를 일본본토 방위를 위한 지구전과 방위전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일본 패전 후에는 오키나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에 ‘할양’하였다(박훈 2008, 81-82).

미국의 지배 하에서는 오키나와인들은 미국인도, 일본인도, 오키나와인도, 류큐인도 아닌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외정세의 변화와 20여년 이상의 줄기찬 오키나와인들의 저항에 힘입어 1972년 일본본토에 반환되었지만 일본국 영토의 0.6%에 불과한 이 섬은 일본 주둔 미군기지의 75%를 떠안고 있다(박훈, 2008, 82). 미군기지와 공공사업 및 리조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현정부와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에 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가장 가난한 현으로서 ‘일본 아닌 일본’으로 존재해오고 있다(주은우 2008, 414).

현재 오키나와인들은 약 130여만 명으로 추산되며 일본 내에서 민족적으로 일본인과 구분되는 제일 큰 규모의 민족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 편입된 지 1세기가 넘었지만 오키나와인들은 그들 고유의 언어, 풍습, 성씨, 음악, 음식·술 등의 전통적인 문화를 갖고 있으

며, 아직도 많은 오키나와인들은 자신을 일본인이자 오키나와인으로 규정하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일본인보다는 오키나와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2) 오키나와의 민족운동

오키나와의 민족운동은 일본에 의해 오키나와 영토가 편입되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수 있다. 1879년 류큐처분을 거치면서 오키나와가 법제도상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는데, 이 와중에 류큐의 자율성(자치적 왕권)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분출되었다(이지원 2008, 227). '류큐왕국 부활운동'으로 칭하는 이 운동은 약 20여년에 걸쳐 왕족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주로 청에 대한 청원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나, 일부 평민층 및 오키나와 본도 외의 지역으로도 파급되었다. 그러나 청의 쇠퇴와 청일전쟁에서 일본우위가 확증되면서 이 운동은 소멸되고 만다(주은우 2008).

하지만, 이 운동은 1945년 이후 일부 오키나와인들에 의해 류큐공화국 성립을 위한 류큐 민족독립운동의 형태로 다시 이어졌다. 1945년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 후에, 미국의 통치하에 놓인 오키나와에서는 점령 초기에 미국이나 일본으로의 편입이 아닌, 류큐공화국이란 독립국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도 이후 '총칼과 불도저' 정책으로 상징되는 미군에 의한 강압적인 토지수용과 군사기지화가 추진되면서 불만이 가중되어 오키나와 섬 전체의 투쟁이 전개됨으로써 일본 및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일본으로의 편입을 지향하는 복귀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에 대한 시정권이 일본으로 반환되고 오키나와는 일본의 일부가 되었다.

오키나와가 일본 근현대사에서 경험한 오키나와 전투, 미군점령, 본토반환 등은 오키나와인들로 하여금 부정적 혹은 저항적 민족정체성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권숙인 2009, 185) 더불어 미군통치하에서는 일본과 단절된 공간 속에서 오키나와의 삶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토착문화로의 회귀가 이루어짐으로써 오키나와어의 사용이 장려되고, 민요열풍이 일어나는 등 문화적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었다.⁵⁾ 그 결과 일본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오키나와인의 자기인식 및 자문화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4) 2004년 2월 20일자 <오키나와 타임스>에 보도된, 오키나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오키나와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27.5%, '일본인이면서 오키나와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41.8%인 반면,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8.8%에 머물렀다.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일본인보다는 오키나와인이자 일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주은우 2008, 412).

5) 이는 마군정이 오키나와와 일본을 분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키나와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는 정책을 전개한 것과 관련을 가진다. 미군정의 오키나와 전통문화보호? 진흥정책은 오키나와인들이 자신들의 독자성을 추구하고 자문화 회복을 긍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지원, 2008, 238).

(3) 일본의 대응

근대 일본의 오키나와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류큐처분후 오키나와에 군사력을 동반한 강제적 병합을 추진하였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징병령, 헌정 및 선거를 시행하는 등의 법제도적 통합을 이루어갔다. 이와 함께 생활문화전반에 걸쳐서는 일본으로의 동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특히나 일본제국주의 팽창정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는 오키나와 주민에게 황민화의 일환으로 국민정신을 주입하고 군국주의를 양성,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의 방언을 폐지하고 일표준어를 장려하였다. 또한 오키나와 고유의 문화는 ‘열악’하다고 낙인이 찍혔고 각종 차별이 가해졌으며, 생활 전반에 걸쳐 ‘오키나와색’을 배제하는 강력한 동화정책을 추진하였다(이지원 2008, 228). 1944년부터는 본격화된 징집과 체계적인 전쟁동원의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일본에 의한 황민화교육과 전쟁동원의 결과로 오키나와인들은 ‘애국적 자세’로 헌신하나, 결국 사상자가 전 주민의 1/3에 이를 정도의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 그 사상은 미군에 의한 발생보다는 일본군에 의한 학살과 강요된 집단자결에 의한 것이 더 많았다.⁶⁾ 일본은 오키나와를 같은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식민주의적 관점에 입각해서 철저히 차별하고 수단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일본이 추구했던 오키나와 동화는 “일본인과 완전히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자가 되라는 요구”(이지원 2008, 236)였던 것이다.

미군정기에는 미국이 오키나와에 대한 배타적인 시정권(施政權)을 행사하였으며, 일본에게는 오키나와에 대한 잠재주권이 인정되었다. 이로써 일본 본토와는 달리 오키나와는 미군정의 지배아래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어갔다. 오키나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점령을 용인한 대가로 일본은 미일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경제적 번영의 길을 걸어갔지만, 오키나와인들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같은 기본권이 제약당했고, 기지건설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등 재산권행사가 박탈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지건설과 훈련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소음공해, 살인과 성폭행과 같은 미군범죄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정근식 외 2008, 22).

1972년 일본으로의 복귀 및 반환이후부터는 일본은 본토의 관광산업육성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오키나와를 관광산업화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그 결과 오키나와는 일본 전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찾아드는 관광의 섬이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들어 일본 본토에서의 에스닉 붐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오키나와의 토착문화에 대한 명시적이고도 노골적인 차별과 배제는 사라졌으며, 오히려 ‘오키나와 붐’이 일어나는 등 오

6) 오키나와는 1945년 일본영토에서 벌어진 유일한 지상전이자 2차대전 중 가장 치열했던 오키나와 전투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철의 폭풍이라 불리는 오키나와 전투는 정규군보다 민간인이 훨씬 더 많이 희생된 전투다. 인구의 1/3이상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진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이 강요한 집단자결 등에 의해 미군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는 비극을 겪었다(정근식 외, 2008, 20).

키나와 민속문화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정근식 외 2008, 23 ; 이지원 2008, 270). 그러나 일본사회의 이 같은 변화와 일본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가장 가난한 현으로 존재한다.

3) 재일한인

(1) 배경과 역사

재일한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동이민이나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던 200여만 명의 한인들 중 종전 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잔류하게 된 약 60여 만 명의 사람들이 그 출발점이 된다.

재일한인이 일본 내 다른 민족집단과 구분되는 것은 다른 이민족집단의 경우 법적으로 일본인(일본국적자)임에 비해, 재일한인은 귀화를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비국적자)이라는 점이다(권순인 2009, 186). 식민지시대 일본이 재일한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본국적을 부여하여 종전직후까지 그것이 유지되었으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일본정부는 일방적으로 재일한인의 일본국적을 박탈해버리고 만다. 그 결과 재일한인은 일본국적자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변경되었다. 그 뒤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해 협정영주권을 얻게 된다. 1991년 출입국관리특별법의 개정으로 구식민지출신자 및 그들의 일본출생 자손으로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특별영주권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재일한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영주자의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에는 재일한인의 내부구성도 급격히 바뀌어, 2, 3, 4세가 주류를 구성하고 있으며, 오늘날 재일한인의 결혼 중 일본인과의 결혼이 90%를 차지할 만큼 일반화되어 재일한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혈이 증대하고 있다(한영혜 2010, 321). 재일한인과 일본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세대교체에 따른 일본사회로의 동화가 진점됨에 따라 일본국적을 선택하는 귀화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기준 재일한인(한국·조선 국적)은 약 5십8만여명(정확히는 578,4995명)⁷⁾이고 그 가운데 일본 패망 이전부터의 거주자와 그 자손으로 구성된 특별영주자는 약 4만 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 재일한인의 민족운동과 일본과의 갈등

아이누와 오키나와에서 나타나는 민족운동과 비교할 때 재일한인의 경우 일정한 지역과

7)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은 일본패망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과 그 자손뿐 아니라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들인 이른바 ‘뉴커머’도 있다.

결부된 민족문화운동의 형태라기보다는 재일한인을 위한 민족교육운동,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철폐운동, 재일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운동, 일본사회에서의 재일한인의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는 운동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종전을 기점으로 한국 언어와 한국 역사에 대한 교육을 위해 민족학교를 설립하는 등 민족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의 재일한인들은 일본에서의 생활을 일시적인 삶으로 여기고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주(假住)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재일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귀국 후 본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민족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가르치는 교육 문제였다. 이를 위해 당시 한인사회에서는 민족학교를 세우고 대대적인 민족교육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48년에는 초등학교 566교 5만 3천명, 중학교가 7개교 3,300명, 오늘날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청년학교가 33개교 1,800명에 이르는 상황이었다(호사카 유지 2003, 66-67). 또한 당시의 민족학교는 재일한인을 묶는 중심점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미군정과 일본정부는 재일한인 민족학교에서 교육하는 교육내용을 일본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불온한’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민족학교를 강제 폐쇄시키는 등의 강도 높은 탄압을 수행하였다. 이에 재일한인들의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는데 특히나 한인들이 많이 사는 한신지역(오사카, 고베)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어났다.⁸⁾ 그러나 민족교육운동의 핵심단체였던 재일조선인연맹이 강제 해산되었고, 이후 일본정부는 재일한인들의 완강한 운동에 직면하여 제한적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족교육을 인정하고 민족학교의 설립을 허가하였다.⁹⁾ 그 뒤 조총련이 건설되면서 민족학교가 다시 부흥기를 맞게 된다(안해룡 1994, 68-72; 김인덕 2006, 211-240).

1960년대를 지나면서 재일한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정착하고자하는 정주화의식이 확산되었고, 동시에 일본 사회의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일본사회에서의 차별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본격화되어 당시 재일한인에 대한 모욕, 취업차별, 공무원 임용거부, 지문날인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재일한인들은 뜻있는 일본인들과 연대하여 지문날인과 취업차별, 임용거부 등에 대해 거리시위와 법정투쟁 등의 방법으로 일본정부와 사회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일한인 사회는 세대교체와 정주화현상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조국에 대한 지향의식을 가지고 한국인으로 살아온 1, 2세대들은 이미 작고했거나 노령화로 사회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일본인과 같은 정서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 3, 4세대의 수가 늘어나 이들 사이에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 3, 4세대들은 재일한인사회의 주축을 형성하고

8) 이는 424 한신교육대투쟁이라 불리며 훗날 재일한인들은 그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열의와 결기를 대변하는 이 운동이 절정에 달한 날인 4월 24일을 기념하게 된다.

9) 민족학교 사립인가와 공립조선인학교 설립이 인정되어 일본 정규과목 외에 조선어(한글)와 조선역사에 대한 교육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있으며 1, 2세와는 다르게 조국과는 일정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임시체류지가 아닌 영구 거주지로서의 일본을 전제로 일본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권숙인 2011).

한인사회의 세대교체와 함께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특별영주권의 획득과 더불어 재일 한인의 지위가 이전보다 향상되었으며, 세대교체에 따라 일본사회로의 동화가 진점됨으로써 생활상의 어려움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재일한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배경으로 재일한인의 정체성을 재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다(한영혜 2010, 321). 이러한 흐름과 아울러 최근에는 3, 4세가 중심이 되어 일본사회에서 뿌리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재일한인에게 있어서 일본국적 취득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에 국적이나 이름(민족명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일본에서 코리아계 시민으로의 삶과 정체성을 구축하는 태도를 취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국적과 민족을 분리하여 일본사회에서 코리아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한영혜 2010, 322). 또한 재일한인들의 인권운동도 민족운동이나 종래의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운동에서 재일의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나 문화운동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3) 일본의 대응

전후 재일외국인으로 규정되었던 재일한인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그들을 배제하든가 아니면 동화시킴으로써 일본 민족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를 없애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나타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될 때 까지는 재일외국인에게 일본국적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였으나 이 선언과 동시에 재일한인은 일본국적의 상실과 함께 원래의 국적을 회복하여 일본에서 외국인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는 전쟁 전부터 살고 있는 재일한인의 국적선택권을 무시한 채 구식민지 민족을 일방적으로 배척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도라고 할 수 있었다.¹⁰⁾

그러나 그 뒤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협정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한국의 재외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게 되고, 일본에서는 협정영주권을 얻게 된다. 그러나 당시 부여된 영주권은 일본인과는 신분상의 커다란 차별적인 거주권이었고, 재일한인에 대한 처우도 낮았다. 무엇보다도 당시 체결된 협정은 재일한인 사회를 분열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북한 정권을 지지하여 한국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거나 또는 신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은 영주권을 신청한 사

10) 이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 각국이 식민지를 해방했을 때, 구식민지 주민들에게 '국적선택권'을 부여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조정남, 1999, 150)

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었다. 즉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한인과 그렇지 않은 한인을 분리함으로써 한인사회의 분열을 가속화시켰으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조정남 1999, 152).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한인사회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67년부터 1969년까지 3년 동안 (외국인등록법안)을 제출하여 한인사회내의 민족교육을 감시하거나 억압하고자 하였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일본정부는 일본 내 타민족에 대응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귀화정책을 사용하였다. 일본의 단일민족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차원에서 구식민지 출신민족을 추방하려했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이들의 이질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귀화정책을 사용하였으며 그 주된 표적은 바로 재일한인이었다(조정남 1999, 142). 동시에, 일본 정부는 귀화과정에서 일본식 성을 강력히 권장하는 행정지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외국인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시민적 귀화가 아니라 그들을 일본사회에 완전히 융합시켜 소수민족으로서의 존재를 말살시키려는 동화적 귀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조정남 1999, 142).

다른 한편, 일본사회의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재일한인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재일한인이면서도 재일한인임을 떼땀이 내세우지 못하게 만들었다. 재일한인들은 일본사회의 차별이 두려워 그들 자식들의 경우 “어려서부터 일본식 이름인 통명만을 쓰게 하고, 일본인학교에 진학하여 일본인처럼 키우게” 했다(조상균 2007, 355). 이러한 일본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재일한인 스스로 자신들의 동질성을 버려야했고, 재일한인들은 “자발적 귀화가 아닌 비자발적인 귀화를 강요” 받게 되었던 것이다(조정남 1999, 142).¹¹⁾ 더욱이 법적 지위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재일한인이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다는 점은 일본의 동화주의 압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권숙인 2004, 186).

재일한인은 선주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경위가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선주민의 권리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상에서 보듯이 일본은 재일한인이 이민족집단으로 남아있는 데 대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강력한 동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일본민족의 단일성을 지속시키려고 하였다.

이상으로 일본 내에서의 전통적인 민족집단으로 아이누, 오키나와, 재일한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들 민족은 전체가 대략 500여 만 명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은 이들 민족집단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정하였고, 이민족집단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철저히 강요된 일본사회로의 ‘동화주의’ 였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일본사회에서 전통적 민족집단의 존재방식이 ‘비가시적’ 이었다는 점도

11) 일본의 신국적법이 시행된 1950년부터 1988년까지 귀화한 외국인인은 19만 명에 이르는 데 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14만 5천 명이 재일한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조정남, 1999, 142).

또 하나의 주된 특징이라 볼 수 있다.(권숙인 2004, 187). 아이누인과 오키나와인들은 인종적으로 구분되지만 아이누인의 경우는 워낙 그 수가 적고, 오키나와인은 오키나와라는 지역에 주로 살기에 주류 일본사회에서 만나거나 의식하는 경우 매우 드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일한인의 경우 일본인과 인종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다가 2, 3, 4세대들은 언어를 비롯한 의식이나 문화적 취향에서 일본인과 구분이 되지 않기에, 일본식 이름을 쓸 경우 재일한인의 정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세 전통적 민족집단은 일본사회에서 비가시적 존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민족집단의 비가시성은 바로 일본 주류사회의 제도적 일상적 차별과 편견, 동화주의, 일본사회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일본의 새로운 민족상황과 일본의 대응

1) 일본 민족환경의 변화

일본사회에서 아이누, 오키나와, 재일한인과 같은 전통적 소수민족이 오랫동안 존재해왔으나 그동안 일본은 민족구성에서의 다양성을 외면한 채 단일성만을 강조하는 단일민족론을 공식적 입장으로 옹호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단일민족론은 일본사회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낡은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민족문제는 그 이전과는 현격히 다른 국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이후 일본 사회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민족구성원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으로 불려지는 다른 민족 구성원의 급격한 수적 증가로 인한 것이다.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수는 1960년 578,519명으로 총인구의 0.67%였으나 1990년에는 886,397명(총인구의 0.87%), 2000년에는 1,686,444명으로 총인구의 1.33%로 증가했다. 2008년에는 2,217,426명(총인구의 1.74%)으로 최고로 달한 후, 2009년에는 경제침체로 인해 127,510,000명(총인구의 1.71%)으로 다소 줄었다.(<표1>참고) 이로 인해 일본열도 어디를 가도 외국인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2009년 현재 일본의 외국인등록자수는 2,186,111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1.7% 이상을 점하고 있다(일본 법무성 등록 외국인 통계 2011). 특히 대도시의 경우 3%를 넘어서고 있어¹²⁾ 일본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을 마주치기가 어렵지 않는 일이 되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이주자들의 증가에 따라 일본내부의 민족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사회는 다민족성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인종적 민족적 단일성과 관련하여 일본인들이 기존에 유지해오던 단일인종, 단일민족이라는 관념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12) 법무성 입국관리국 2010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외국인은 도쿄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10월 현재 415,050명의 외국인이 도쿄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도 인구의 3.2%를 차지한다.

국적별로 현황 및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표2>참고) 2009년 현재 일본 내 외국인의 국적(출신국가) 수는 189개로, 이 중 중국이 680,518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에서 30%를 차지하여 일본 내 등록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국적이 되었다. 일본 내 전통적 외국인집단이었던 재일한인은 한국국적과 조선국적을 포함하여 578,495명으로 26%를 차지한다. 재일한인의 숫자와 비율은 점차 줄어들면서 2007년 들어 처음으로 중국에 1위를 내주었으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일본 내 외국인 노동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일본계 브라질인과 페루인들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9년 현재 일본계 브라질인과 일본계 페루인은 267,456명(12.2%)과 57,464명(2.6%)에 달하여 일본계 남미출신 노동자와 가족비율은 전체 외국인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외국인등록자 증가 추이

연도	외국인총수	일본인수	비율(%)
1960	578,519	94,301,623	0.61
1970	604,253	104,665,171	0.58
1980	668,675	117,060,396	0.57
1990	886,397	123,611,167	0.72
2000	1,686,444	126,926,000	1.33
2001	1,778,462	127,316,000	1.39
2002	1,851,758	127,486,000	1.45
2003	1,915,039	127,694,000	1.49
2004	1,973,747	127,787,000	1.54
2005	2,011,566	127,768,000	1.57
2006	2,084,919	127,770,000	1.63
2007	2,152,973	127,771,000	1.68
2008	2,217,426	127,692,000	1.74
2009	2,186,121	127,510,000	1.71

* 출처: <http://www.stat.go.jp/data/nihon/index.htm>

한편, 이들 외국인은 일본사회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유형에 따라 일본 정부의 대응과 정책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 민족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상으로 떠오른 집단인 닛케진(일손인, Nikkeijin)은 1868년부터 1973년 사이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던 일본인들의 2-3세 후손을 지칭하는 말로, 특히 브라질, 페루 국적의 후손과 그 배후자를 의미한다. 닛케진은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3D 직종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었고, 또한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등의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 불황을 맞게 되는 상황이 겹치면서, 이들이 대거 일본으로 유입하게 되었다(최병두 2011, 21). 이들은 1990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개정)에 따라 일본 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정주자격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합법적 취업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그 결과 중남미 출신 일본인 이민자 후손들이 대거 입국하게 되었으며 일본 내에 중국인, 재일한인 다음으로 많은 집단이 되었다. 다른 뉴커머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연수’, ‘특정활동’, ‘단기체류’, ‘홍행’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는 반면에 이들 닛케진은 정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라는 체류자격을 가졌다. 일본정부는 외국인 단순노동자의 유입을 억제하면서도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계 혈통을 가진 이들을 정주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입국을 허용한 것이다. 이들은 혈통을 공유하는 이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일종의 ‘특권’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이들이 일본인 혈통을 이어받았다고는 하나 일본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매우 약한 편이라 일본사회 적응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표 2〉 국적별/연도별 외국인 등록자 수

국적/연도별	1997	2001	2003	2005	2007	2009	
						수	비율(%)
중국	252,164	381,225	462,396	519,561	606,889	680,518	31.1
한국조선	645,373	632,405	613,791	598,687	493,489	578,495	26.5
브라질	233,254	265,962	274,700	302,080	316,967	267,456	12.2
필리핀	93,265	156,667	185,237	187,261	202,592	211,716	9.7
페루	40,394	50,052	53,649	57,728	59,696	57,464	2.6
미국	40,690	46,244	47,836	49,390	51,851	52,149	2.4
기타	43,690	245,907	277,421	309,450	321,489	338,323	15.5
총수	1,482,707	1,778,642	1,915,030	2,011,555	2,011,555	2,186,121	100

※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 관리국 <http://www.moj.go.jp/content/000074950.pdf>

두 번째 유형은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하거나 외국인이었다가 귀화를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인이 된 사람들이다. 일본국적의 취득은 1984년 국적법의 개정 이후 부계뿐 아니라 모계로도 획득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들어 일본인의 국제결혼이 25,600건을 넘어서는 등 눈에 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표3〉참고) 2009년 현재 국제결혼건수는 34,393건으로 전체 결혼의 4.9%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귀화인과의 결혼 또한 상당한 숫자에 이르며, 특히 재일한인이나 중국인 상당수는 이미 일본으로 귀화한 상태인데 이들과의 결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조정남 1999, 47). 귀화자들의 수는 1990년대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여 매년 평균 1만5천명 정도에 달하며, 그 가운데 한국조선인이 약 1만 명, 중국인인 45천명에 달한다(일본 정부통계종합 창구 2011). 국제결혼이나 귀화를 통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된 외국인이주자들은 국적은 일본이지만 혈통이나 문화적으로는 완전한 일본인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는 피의 순수성을 근간으로 하는 일본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표 3〉 일본인의 국제결혼 추이

연도	총결혼건수	외국인남	외국인여
1965	4,156	3,089	1,067
1970	5,546	3,438	2,108
1975	6,045	2,823	3,222
1980	7,261	2,875	4,386
1985	12,181	4,443	7,738
1990	25,626	5,600	20,092
1995	27,727	6,940	20,787
2000	35,263	7,937	28,326
2005	41,481	8,365	33,116
2009	34,393	7,646	26,747

※ 출처: 일본 정부통계종합 창구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66477>

세 번째 유형은 연수제도 및 그 이후 수정된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이주한 노동자들이다. 1981년 외국인 노동연수제가 도입되고, 1993년 연수 후 기능을 습득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들 제도는 명목상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일본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제도를 통해 일본에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2008년 현재 중국인이 65.5만명, 필리핀인 21.1만명, 타이인이 4.3만명을 차지하고 있다(일본 정부통계종합 창구 2011). 이들은 주로 제조, 건설, 금속, 플라스틱, 섬유 등 일본인이 기피하는 산업현장을 비롯한 단순 저임금 부분에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최대 3년밖에 머물 수 없고, 일정기간 취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앞서 언급하였던 일본사회의 전통적인 민족소수자인 재일한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 이주하여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일본에 잔류하고 있는 한인과 그 자손들로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민족적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본에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많은 재일한인들이 귀화나 일본인과의 결혼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재일한인의 경우 혈통은 일본인이 아니나 세대를 걸쳐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문화를 체득하고 있으며, 민족적 정체성도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외에 일본 내 유학생과 취학생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1983년 일본의 국제화를 주창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은 유학생 10만명 계획을 발표하여 다양한 제도를 정비해왔다(양기호 2009, 230). 그 결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 출신의 유학생은 비약적으로 증가해 2010년 현재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졸업 후 일본사회에서 취직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등 정주화도 진행되고 있다.

2) 일본의 대응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이주민의 급증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대처가 행해졌다. 일본의 외국인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은 우선, 외국인이주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올드커머라 할 수 있는 재일한인이나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화주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연수와 노동을 하기 위해 일정기간 일본 국내에 체류한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배제주의 정책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금융, 기술, 무역 등 전문적 영역에 종사하는 일본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합법적인 노동자는 동화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또 중남미에서 유입한 일본계 혈통을 가진 이주노동자의 경우 민족적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주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외국인이주자들에 대한 대응은 1990년대에는 '내향적 국제화', 2000년대에는 '다문화공생'이라는 이름으로 담론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병두 2011, 29-31). 내향적 국제화전략은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초기단계에 부각되었던 것으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의해서 일본 지역사회에 유입되는 외국인이주자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유입되는 외국인이주자들을 지역주민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1988년 전국 차원의 '국제교류협회'와 이들의 지부를 모든 광역지자체들에 두게 되었고, 1990년대 초부터는 지역의 외국인 이주자들로 구성된 '외국인시민회'가 조직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 초에는 외국인이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집주도시회의가 발족하여 상호교류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다양한 관련 사항들을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기존 일본 통치체제를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병두 2010, 1143-1165 ; 한승미 2003, 116-147).

2000년대에 이르면 내향적 국제화는 다문화공생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문화공생이란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표현하는 대표적 슬로건이지만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해야 할 구체적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최병두 2011, 31). 일본 총무성이 2005년 설치한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 지원(다언어정보, 다언어상담, 일본어학습, 일본사회 학습 등), 생활지원(입주지원, 교육지원, 노동, 의료, 보건, 복지, 방재 등),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일본인에 대한 의식계발, 학교와 도서관 등 지원 거점 시설 마련, 교류 행사 등), 정책추진을 위한 체제 정비(담당조직 설치, 정책분야를 담당하는 조직 설치, 전문 인재 육성, 모델사업 실시 등) 등을 담고 있다(김웅성 2010, 101-102).

이러한 다문화공생 정책은 중앙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이주자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자체와 지역시민단체에 의해 다문화공생이 추동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특색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가 다문화공생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관련시책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이다. 오히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는 보수적 견해나 입장, 일본민족주의 부활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에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실험과 대응을 통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반차별주책조례를 제정하거나, 보육원에 외국인보모를 고용하며, 다국어로 시의 정보지를 내고 해당언어가 가능한 직원을 시청에 배치할 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민족화된 지역사회 주민을 배려하는 노력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정책은 이념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최병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최병두 2011, 32).

첫째, 일본의 다문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지역들 가운데 많은 지자체가 일본계 브라질인과 페루인 집주지역으로 나타난다. 즉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은 문화적으로는 이질적이지만 혈연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일계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둘째, 다문화공생정책은 일본에 상당수 거주하는 미등록신분의 외국인노동자는 배제하는 반면에 합법적인 정주 외국인 이주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셋째, 일본의 다문화공생은 참정권을 비롯한 여러 정치경제적 문제는 뒤로 하고 언어소통과 같은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공생’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다문화공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자체의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미등록외국인 주민의 소재 파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다문화주의에 바탕을 둔 다언어서비스 제공에서 일본어와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제공으로 전환해나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문화공생은 동화주의에 입각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민족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일본민족주의

민족주의는 근대국가의 건설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국가의 단결이 요구될 때 크게 부각되며 국민동원에 이용되기에 좋은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타자와의 구별로 배타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배타성은 내부결속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외부인을 희생양 혹은 속죄양으로 사용한 권력자의 의도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윤설이 2009, 18). 한편, 민족주의는 때로는 비자발적인 충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심지어 국가를 위한 죽음까지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자신의 국가 내, 그리고 영토 내의 다른 것들을 수용하려 하지 않으며, 이는 국가 내에서의 외국인 또는 외부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윤설이 2009; Graham Day & Andrew Thompson 2004)

일본민족주의도 이와 같은 특징에 기반하고 있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일본을 근대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일본제국주의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도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다른 민족과 국가들에게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영토를 확장해가면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식민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접할 수 있었지만, 침략자적 입장에서 타민족과 타문화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거나 차별하고, 우월한 자민족과 자문화에 포섭되어야 한다는 차별정책과 동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단일민족 단일문화 이데올로기를 유지해왔다(최병두 2011). 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과정에서 일본은 식민지민족을 황민화하는 새로운 민족통합의 논리를 내세워 그들을 일본국민화하고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원하였다.

이러한 일본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도 작용하여 일본 내 다른 민족인 아이누, 오키나와, 재일한인과 같은 이민족집단에 대해 차별과 철저히 강요된 일본사회로의 동화주의로 일관하였다. 이민족집단의 민족적 정체성을 억압하거나, 통명사용을 강요하는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의 문화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소수자에게 밀어부친다든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정책으로 나타난다.

2차 대전 패배이후 일본은 미국에 의해 새로운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일본 내 존재하는 이민족집단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정책을 지속하면서 자민족 중심의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내의 이질적인 요소와 복합적인 요소는 없어지기보다는 갈수록 다민족적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경제력의 확대, 국제화에 따른 인적교류의 증대로 일본 내 민족환경은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아온 이민족집단과

더불어 새롭게 유입된 외국인이 2009년 현재 1.7%를 넘어서고 있다. 다양한 외국인의 유입, 그들과의 국제결혼에서 비롯되는 2세 문제, 재외일계인의 귀환 등 새로운 다민족적 환경에 직면해있다. 결국 일본사회도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종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그동안 유지해오던 동질성에 기반한 단일민족 신화를 버리는 등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주요 대응전략으로 형성되고 있는 다문화공생을 비롯한 다문화담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다민족,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다문화주의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문화소수자에 대한 권리부여를 통한 아이덴티티의 공적인 승인에 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수자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는 동화와는 다른 개념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특히나 정부정책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상호교류를 통한 각각의 문화의 풍부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류의 문화를 강요하고 동화일치를 요구하는 일본화로 표출되고 있다. 일본에의 ‘동화’를 조건으로 외국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띠어 동화되지 않으면 배제 또는 차별한다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조상균 2007, 352). 이러한 이민족집단에 대한 동화정책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제 식민지시대의 억압적 동화정책에서 발원하여 현재에도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일본사회에서 다문화공생을 비롯한 다문화담론이 확산되었다고 해서 재일외국인과 민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의 신화 또는 단일민족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이념이 확립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영혜 2006).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일본민족주의가 부활되고 있는 일본의 상황도 일본이 표방하는 ‘다민족,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공생담론’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 재등장한 민족주의는 “냉전종결에 따른 세계질서의 급변, 그에 따른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변화라는 국제정치적 요인, 냉전의 종결에 따른 사회당의 몰락, 일본정치계의 총여당화라는 국내정치적 요인, 1980년대 이래 일본경제의 쇠락이라는 국내 경제적 요인, 1990년대 일어난 대규모 자연재해 및 사회 사건들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와 함께 세계화에 대한 일본의 두려움과 반발” 등이 결합되어 부활한 것으로 진단된다(전재호 2005). 이러한 일본 민족주의는 애국심과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육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을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재등장한 민족주의는 자와 타를 구별하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기에 외국인거주자라는 새로운 구성을 포괄하는 등 일본사회가 다민족사회를 형성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일본민족주의는 일본 내의 다양한 민족과 인종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한국, 중국, 대만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일본사회에서 민족주의 정서는 일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결합하여 일본 지배계층에 잔존해있는 동질성의 신화에 대한 향수를 자극함으로써 다문화공생 담론과 정책을 비롯한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지향과 가치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다문화사회로의 지향과 가치가 일본 민족주의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다문화공생담론이 새로운 민족주의와 결합됨으로써 그 폐쇄성을 은폐할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한영혜 2006).

5. 결론

지금까지 일본을 중심으로 타자인 타민족에 대한 일본의 수용과 대응을 살펴보고, 그것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고찰해보았다. 일본은 근대국가 형성 이후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파생된 일본의 전통적 이민족 집단과 식민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동화와 차별에 근거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이주자들의 급증으로 다민족성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소수자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본주류사회로의 동화를 강화하는 동화주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민족에 대한 일본의 이 같은 대응과 수용태도의 배경에는 일본의 민족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족주의는 일본의 이민족집단을 비롯한 외국인이주자 대한 배타감에 대한 기저가 되고 있었다. 자와 타를 구별하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을 지닌 민족주의는 다민족사회를 형성하는 데 그리고 새로운 구성원을 포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이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비롯한 다문화공생담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일본 민족주의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나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의 '외국인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일본 내에서 민족주의의 병리가 분출해 나오는 주요한 공간이 외국인문제이다. 치안의 악화, 실업, 경제 불황이라는 일본의 상황은 외국인 차별과 배척의 주요한 담론을 형성하게 한다. 일본에서 사회구성원의 다양화와 다민족사회로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 할 수 있기에 이제 타자에 대한 배타심에서 벗어나서 외국인이주자들을 비롯한 이민족집단과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일본의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가이자와 코이치. 2001. “아이누 민족의 역사와 문화”,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1』, 정근식 · 하종문 편, 서울: 삼인, 279-280.
- 광진오. 2006. “日本民族主義의 現象과 展望: 전후 현상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5권 1호, 37-59.
- 권숙인 외. 2010.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권숙인. 2004. “일본사회의 변화와 민족문제의 새로운 전개”, 『일본연구논총』 19, 181-210.
- 권숙인. 2009. “일본의 ‘다민족?다문화화’ 와 일본연구”, 『일본연구논총』, 29, 195-221.
- 권숙인. 2011. “재일코리안의 ‘지금, 여기’”, 『심층분석아시아뉴스레터(서남포럼)』, 2011.3.14,
(http://www.seonamforum.net/newsletter/view.asp?idx=1887&board_id=21&page=2)
(cited 2011. 6. 16.)
- 김응성. 2010. 『한일다문화정책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인덕. 2006. “일제시대 재일조선인사 속의 ‘탄압과 박해’ 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5, 211-240.
- 박훈. 2008. “ ‘류큐처분’ 기 류큐 지배층의 자국인식과 국제관”, 『경계의 섬 오키나와: 기억의 정체성』, 정근식 외 저, 논형.
- 아라사키 모리테루. 오키나와 현대사, 정영신 · 미야우치 아키오 역, 논형, 2008.
- 안해룡. 1994. “4·24 한신교육투쟁과 재일동포 민족학급”, 『중등우리교육』53, 68-72.
- 양기호. 2009. “다문화정책의 한일비교”, 『日本學報』80, 225-239.
- 윤설이. 2009. 『다문화사회와 민족주의: 한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 이지원. 2008. “오키나와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자문화인식”, 『사회와 역사』, 78, 223-276.
- 이태주 · 권숙인.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문화인류학회.
- 이토 아비토. 2009. 『일본사회 일본문화』, 임경택 역, 소와당.
- 일본의 통계 2011. <http://www.stat.go.jp/data/nihon/index.htm>
-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moj.go.jp/content/000074950.pdf>
-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moj.go.jp/content/000074950.pdf>
- 일본 총무성 통계국.

<http://www.stat.go.jp/data/kokusei/2000/gaikoku/00/01.htm>

- 일본 정부통계종합 창구(총무성 통계국, 독립행정법인 통계센터).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66477>
- 일본 법무성 등록 외국인 통계. <http://www.moj.go.jp/content/000074951.pdf>
- 전재호. 2005. “세계화시대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 지속성과 변화”, 『韓國政治外交史論叢』, 24/2, 33-62.
- 정근식 외 편저. 2008. 『경계의 섬, 오키나와 : 기억과 정체성』, 서울: 논형.
- 정근식 · 하종문 편. 2001.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1』, 서울: 삼인.
- 정근식 외 편저. 2008. 『기지의 섬, 오키나와 : 현실과 운동』, 서울: 논형.
- 정병호. 1995.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소수민족 아이덴티티의 부활-일본 홋카이도의 선주민 아이누민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학연구』1, 301-319.
- 정진성 외. 2010.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상균. 2007. “일본의 다문화 정책과 재일동포의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7권 1호, 347-383.
- 조아라. 2010. “일본의 아이누 문화정책과 소수민족 정체성”,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07-150.
- 조정남. 1999. 『일본의 민족문제』, 서울: 교양사.
- 주은우. 2008. “섬의 시선: 영화와 오키나와의 자기정체성”, 『경계의 섬 오키나와 : 지역의 정체성』, 정근식 외 편저, 서울: 논형.
- 최병두. 2010.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활동: (2) 지역사회 다문화공생 거버넌스-오사카와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4/2, 143-165.
- 최병두. 2011. “일본 다문화사회로의 사회공간적 전환과정과 다문화공생 정책의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17/1, 17-39.
- 한승미. 2003.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 와 다문화주의의 실험: 가와사키시 및 가나가와현의 외국인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6/1, 116-147.
- 한영혜. 2006.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사회와 역사』 71, 155-184.
- 호사카 유지. 2003. “일본의 정주외국인 정책과 재일코리아안-참정권, 국적조항철폐, 교육권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연구』11, 58-70.
- 호카마 슈젠. 1986.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심우성 역, 서울: 동문선.
- Day, Graham & Thompson, Andrew. 2004. *Theorizing Nationalism : Debates and Issues in Social Theory*, Palgrave Macmillan.